

종합·해설

범여권 '원샷 대통합' 금물살 타나

〈후보단일화+합당〉

공론화 공감...신당·민주 물밑 논의

정동영 후보 제기...대선 변수 부상
이명박 독주엔 극적 성사 가능성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샷 대통합'(후보단일화+정당통합)을 포함, 범여권 대통합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범여권 원샷 대통합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와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물밑 접촉을 갖고 후보단일화과정에서의 범여권 대통합을 이루는 원샷 대통합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범여권의 제정기간의 뿌리깊은 갈등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선 막판 원샷 대통합 성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최인기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민주·개혁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단일화와 함께 정당 통합을 이루는 원샷 대통합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샷 대통합이 어렵다면 DJP 연합 형식의 정치 연합체 구성이라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한, "김효석 원내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이뤘으며 범여권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민주·개혁세력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여권이 후보단일화와 함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보

수·냉전세력인 한나라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요구며 범여권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상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후보단일화에 가능하지만 대통합 민주신당과의 정당 간의 통합은 없다고 밝힌 만큼 대선 막판 원샷 대통합의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문국현 후보가 가지않는 후보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범여권 세력의 정치적 정체성 및 노선이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 대통합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범여권 세력의 내년 총선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중순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고 범여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20% 중반에서 10%대 중반에 그친다면 원샷 대통합론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와 범여권 세력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여론의 물살이 급속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대선 막판 극적인 대통합을 원하는 여론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선 범여권 대통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치 세력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분열 세력으로 낙인찍히면서 추후 총선 등에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원샷 대통합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샷 대통합을 거론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대선 구도의 흐름에 따라 막판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한 범여권 대통합을 외면하는 정당은 18대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 시민모임’의 대표인 한승현 전 감사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시민모임 회의에서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가 애매한 결론을 내놓았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락 “하고 싶어서 하는줄 알아...”
이철희 前정보차장보 증언 확보

국정원 진실위 ‘김대중 납치사건’ 조사 내용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은 유신 시대에 정보기관이 개입한 대표적인 정치공작 사건으로 그동안 진상이 은폐된 채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야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24일 내놓은 조사결과가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실위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사항을 ▲중징에 의한 납치여부 ▲최고위 지시자 ▲공작목표 ▲정부의 조직적 진상은폐 여부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개입 여부였다. 박 대통령은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90여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으나 이후 두사람은 정적(政敵)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고 박 대통령은 김대중씨의 정치활동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당연히 사건 배후에 관심이 쏠렸고 그동안 ‘이후락 중정부장 지시설’과 ‘박정희 대통령 지시설’로 주장이 엇갈려왔다.

진실위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 보존자료 1만2천833쪽과 김대중도서관 등 타 기관 보유자료 2천651쪽, 그리고 납치사건에 관여한 전직 중정부원 11명과 용공호선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후락 부장이 중정 공작부서에 납치공작을 추진토록 지시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됐으나 박 대통령이 사전에 납치 지시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핵심자료인 ‘KT공작계획서’가 남아 있지 않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진실위는 여러 정황과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 분석해 볼때 “박 대통령의 직접지시 가능성과 더불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황 등을 근거로 추론한 판단인 셈이다.

진실위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 자료로 관련자들의 증언을 제시했다. 최영근 전의원이 1980년 초 이후락 부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의미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과 이철희 정보차장보가 이 부장에게 지시를 받을 당시 반대여부를 피력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했다는 전문(傳聞)증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진실위는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이



도쿄에서 납치돼 한국으로 끌려온 김대중씨가 지난 73년 8월 14일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날 논평을 내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성의를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며 “다만 위원회가 이번 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범행지시, 살해목적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그 결론에서 유유부단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정부, DJ 납치사건 사죄·재발방지 요구

일본 정부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이 한국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범행이었음을 공식 인정한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 일본의 주권 침해에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기무라 히토시(木村仁) 외무성 부

대신은 이날 유명한 주일 한국대사로부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김대중 납치사건 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 당국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공권력 행사로 일본으로서 매우 유감이다”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KAL기 폭파 北공작원 소행” 확인

진실위 ‘자작극’ 등 각종 의혹 불식

국정원 진실위는 24일 KAL858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정식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불식시켰다.

이 사건은 1988년 1월 당시 안기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자작극’이라거나 ‘북한의 테러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돼왔다.

진실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안기부 및 제3국의 사전 인지 및 공작 여부 ▲김현희·김승일의 북한 출신 여부 및 행적 관련 의혹 ▲김현희·김승일의 폭파 범행 여부 ▲사건의 정치적 이용 여부 ▲김현희 재판과정

과 김현희 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 7개 분야로 나눠 조사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1일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됐으나 당시 김현희씨에 대한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미안마 현지에서 KAL858기 동체를 목격했다는 현지인의 증언이 나와 수색작업을 벌이는 관계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이 날로 미뤄졌다.

진실위는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해양탐사 전문가를 동원해 미안마 안단해 하인즈 북(Heinze Bok) 군도의 타웅-파라(Taung-Pa-La) 섬 앞 바다 해저에서 길이 38m 가량의 세 동강이 난 인공조형물을 발견했으나 비행기 잔해 발견에는 끝내 실패했다. 아울러 진실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김현희씨에 대해 10여차

레 면담요청을 했으나 면담이 거부됨에 따라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과 함께 비행기 폭파에 사용된 폭발물 등 일부 사항을 해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당시 정부와 정보기관이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선거 전에 김현희씨를 암살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점과 ‘북괴만행 규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무부, 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 그리고 김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제 활동방안을 검토한 점 등을 밝혀낸 것이다. /연합뉴스

2007년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 1위. 해뉴를 담은 차, 푸조 307SW HDi. Includes an image of a silver car and a Peugeot logo.